

## 방산업체 대표단 일본 방산업계 방문

### 상호 교류 확대 방안 등 관심사항 협의



신 메이와 공업을 방문해 해상자위대 US-1 생산 공장을 견학하는 방산업체 대표단

**한국** 방위산업체 대표단의 일본 방문이 지난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한·일 양국 방산업체 대표단의 상호방문을 통해 우호 증진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87년부터 시작된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일본 방위간대화 방한의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배일성 상근 부회장을 단장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된 방산업체 대표단은 일본 방위청, 방위장비공업회, 조달실시본부, 기술연구본부, 방위간대화 등의 기관과, 후지쯔, 미쓰비시 전기, 시마스 제작소, 신 메이와 공업 등의 업체를 견학하였다.

일본 방위청 장비국장을 예방하여 방산육성을 위해 정부의 업체 지원 사항에 대한 질문에 "업체에서 연구개발한 방산물자는 전량 구매해 주고 업체의 가동률 유지를 위해 업체를 이용한 정비체제를 유지한다"는 답변은 우리나라의 방산육성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의

견이 모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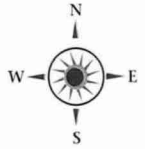
일본 미쓰비시 전기 방문시 회사 순이익보다 연구개발 투자비가 더 높다는 설명은 장차 첨단신무기 개발 가능성과 잠재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일본 방위장비공업회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유사한 단체로 정부측으로부터 방산에 관련된 위탁 연구 사업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외국에서 구입하는 무기체계가 거의 없고 자체개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투자 원가를 전액보상해 준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청 조달실시본부는 원가계산 업무에 많은 비중을 두어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원가자료를 조사하여 최종원가를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원가계산을 함으로써 업체와 방위청간에 불만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장비납품 관련 부조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해 품질 및 장비검사결과 이상이 없을시는 차액의 50%를 방산업체에 포상하고 50%는 방위비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신 메이와 공업은 US-1A를 생산하는 업체로 자위대 정비물량에 대하여 외주정비를 100% 실시하고 있으며, 장비 가격에 비해 정비가격이 40%이며, 업체 가동률과 기술축적을 위하여 업체에서 생산하여 납품한 장비는 100% 업체에서 정비하고 있다.(US-1A 장비가격:7억엔, 정비가격 3억엔)

금번 6차 방문에서는 일본의 방산관련기관과 주요 방산업체의 현지공장을 방문하여 우리의 방산 정책과 방산 및 산업제조 분야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韓 · 美 국방장관 회담의 성과와 의의

##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비해 공조체제 강화키로...

### 한 · 미

양국은 7월 29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한 · 미 국방장관 회담에는 조성태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김임중 국방부 정책정보관, 외교부차관보, 합참 정보참모본부장, 작전참모본부장, 전략기획참모본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미측에서는 코언 美 국방장관, 스테판 보스 위스 주한미대사, 존 킬러리 연합사령관, 랜돌프 하우스 태평양사령부부사령관, 제임스 보드너 美 국방부 정책수석 부차관, 국무부 비확산차관보, 러스트 데밍 국무부 동아 · 태부차관보 등이 참석하였다.

금번 회담에서 한 · 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 불안요소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이들로 인하여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방안들을 심층깊게 토의하였다.

특히 금번 한 · 미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달에 발생한 서해 남 · 북 교전사태,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억류 사건, 북경 차관회담의 중단 및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유동적이며 민감한 시기에 개최되어 한 · 미 연합방위태세를 재점검하고 한반도 위기발생시 양국간의 군사 · 외교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책조율을 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첫째, 북한의 서해도발과 같은 유사사태 재발시 한 · 미 양국은 지난 6월 서해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신속하고도 철저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앞으로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한 · 미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안보에 심대한 위협 요소이며, 한 · 미 · 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한이 재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동북아 지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따라서 한 · 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억제를 위해 국방차원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사일 발사 억제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포괄적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셋째, 한 · 미 양측은 한국의 미사일 자율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적정수준의 미사일 능력 구비 필요성을 상호 이해하고, 실무 협의를 통해 의견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였고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북포용정책의 기초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앞으로도 한 · 미 양국 국방부는 북한의 각종 도발과 위협에 대비하여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 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조성태 국방부 장관과 윌리엄 코언 美 국방장관은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자행할 경우 지난 6월 서해 남북 교전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신속하고 철저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 국방부, 「21세기의 국가안보와 국방비」 보고서

### 적정 국방비의 장기 안정적 배분 필요성 강조

**국방** 부는 최근 발간한 『21세기의 국가안보와 국방비』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21세기를 맞이하는 한반도 안보현실 진단과 중·장기 국방 현대화 수요를 근거로 적정수준의 국방비가 장기 안정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2000년도 정부 예산편성 시 국방요구예산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최근 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이 '70년대에 건설한 전력으로 승리하였듯이 국방비는 투자후 전력화에 장기간의 선행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 계획하에 국방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현시점에서 국방비를 투입하더라도 2010년 이후에야 실질적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99년 국방예산이 사상 최초로 0.4% 감액되는 상황을 비롯하여, 국방비의 배분추세는 최근 5년간 정부재정 증가율(13.8%) 대비 절반수준(6.6%)에 불과하며, GDP 대비 비중도 금년 '99년의 경우 사상 최저수준인 2.8%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방비의 GDP대비 비중이 유사한 안보위협에 처한 국가들의 3분의 1 수준임을 보더라도 더 이상의 국방비 감축은 무리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안보 태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주한 미군전력에 상당 부분 의존했기 때문이지만 장차 21세기에는 주권국가로서 자주적 안보 능력에 기초한 민족의 생존과 국익 수호를 위해서라도 미군 대체전력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국방비가 동결/삭감됨에 따라 물가 및 환율 상승을 고려한 국방비의 실질구매력이 '97년 대비 약 17% 감소하였다.

특히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실질구매력이 '85~'86년 수준으로 하락됨으로써 계획된 투자사업의 축소 조정으로 인한 전력확보 차질, 주요 기동장비 정비 지연 및 핵심군사 기술 연구개발/방산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경상운영비도 과도하게 절감한 결과로 군 전투수행 능력이 약화되고 장병의 사기·복지 수준도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는 실정이다.

현 추세대로 국방비 증가 역제가 지속될 경우,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 및 향후 불특정 안보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확보에 차질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현존 국방운영도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2000년도 국방요구예산은 '98~'99 동결·삭감 분야 정상화를 위한 기본소요 및 핵심전력의 단계적 확보 소요 등을 반영하여, 힘으로 뒷받침되는 대북 포용정책의 수행 보장과 미래의 정보화·과학화 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한 최소 필수소요를 요구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2.1%(국책사업 제외시 8.4%) 증액 수준이나 요구예산 전액이 반영되어도 GDP대비 국방비 부담률은 2.9%에 불과할 전망이다.

적정 국방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 기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2000년도 국방예산은 과거처럼 경제논리 위주로만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적정수준 국방비 획득의 기반인 국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국방부는 금번 홍보책자 발간과 같은 다양한 대국민 설득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중순경 한국경제학회와 공동 주관하에 국방비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대지 미사일 AGM-142 1백여기 도입키로

## F-16에 장착, 최대사거리 110km, 명중률 직경 1m이내로 우수

**국방** 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북한 의 미사일 기지를 정밀 폭격할 수 있는 중거리급 공대지 유도탄인 AGM-142(일명 포파이)를 FMS(대정부간 구매)형식으로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도입하게 될 AGM-142는 PEGASUS사(美 록히드 마틴 사와 이스라엘 라파엘 사의 합작회사)를 통해 모두 1백여 발이 2003년까지 도입될 예정이며, 주로 F-4E/F-16 항공기에 장착하여 운용하게 된다.

공군은 그 동안 단거리급의 AGM-65(매버릭, 사거리 24km)를 운용하여 왔으나 단거리 유도탄은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이 약해 평양 이북의 주요 핵심 타격목표를 파괴하기에는 성능상 미흡하여 한·미 연합 공조체제에 의한 대응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공군은 과거 10여 년간 중거리급 유도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국방부는 올해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업 승인 절차를 밟아 조기 추진하게 되었다.

중거리 원격 정밀 유도탄 AGM-142는 1980년초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극비리에 개발을 시작하여 1986년 중반기에 이르러 이스라엘 공군이 F-4E에 장착하여 작전운용에 투입함으로써 포파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포파이는 현재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원격정밀 미사일보다 다양한 공격전술을 구사하여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AGM-142 도입은 군사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AGM-142의 도입은 북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수단을 확보한다는 의미 외에도 적의 무력도발 의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공대지 정



밀공격 능력이 한층 보강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조기도입 배경에는 최근 코소보 전투에서 보여 준 美 전투기의 정밀공격 미사일의 파괴성과 등 전략적 가치와 포파이급 미사일이 갖고 있는 전쟁 억지력 즉, 유사시 적의 주요 핵심전력을 일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용 공격무기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AGM-142는 유사시 적의 위협무기인 SAM, 대공포 등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아군 항공기의 생존성을 확보하면 동·서해 어느 곳에서나 적의 주요 전략 및 군사 목표물인 비행장, 방공 기지, 지휘 통제 시설, 미사일 기지, 핵 시설물 등을 원거리에서 일격에 파괴하여 적의 추가 공격 능력을 상실시킴으로써 전쟁수행의지를 좌절시키는 결정적 타격을 주는 우수한 무기체계로 평가되고 있다.

AGM-142는 최대사거리가 고고도에서 약 110km, 저고도에서 약 80km이고 목표물 명중률이 직경 1m 이내이며, 1기당 가격은 약 80만 달러(약 9억원)이다. 또한 기상 조건을 고려하여 유휴성 있게 전천후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북한의 스커드, 노동 1, 2호, 대포동 미사일, 화학무기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압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